

## 대구와 10월항쟁

— ‘10·1사건’을 보는 눈, 폭동에서 항쟁으로

김일수

우리 사회에서 현대사에 대한 역사 인식은 객관적인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이다. 식민지시대 민족운동과 해방 후 국가건설과정에 있어 좌익에 대한 평가는 공산주의운동으로 치부되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사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면서 이데올로기적 왜곡을 바로잡고, 국가 폭력으로 은폐된 역사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파헤쳐 이를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최근 우리 사회는 국회를 통과했거나 계류 중인 과거사 관련법이 모두 13개일 정도로 역사 문제가 큰 쟁점이 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제주도 4·3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과거 폭동으로 규정된 4·3사건이 역사적인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4·3’은 최근 발행된 중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과거 ‘공산주의자들의 남한 교란’에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세력이 군·경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새롭게 서술되고 있다. 또한 이제껏 반란사건으로 규정되었던 여순사건이 지역 사회의 자각과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여순민중항쟁으로 새롭게 조

명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대구의 현대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왜냐하면 10월항쟁은 4·3항쟁, 여순민중항쟁과 마찬가지로 해방 후 근대 민족국가 수립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미군정기 최초의 대중항쟁의 성격을 지닌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1946년 10월 1일부터 두 달간 전국에서 소용돌이쳤던 10월항쟁은 지금까지도 '폭동'과 '소요'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그것은 '10·1' 사건에 대한 학문적·사회적 진실규명 노력이 취약했다는 점과 대구 사회의 정치적 정서와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10·1사건'은 해방공간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을까. 10월항쟁에 대한 역사적 관심이 진작되기를 기대하면서 항쟁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기로 한다.

#### 대구의 근현대 변혁운동사의 흐름

10월항쟁이 발생한 대구의 근현대시기 변혁운동은 어떠했을까. 대구는 개항 이후 근대 민족국가의 건설 과정에서 민족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지역이었다. 먼저, 을사조약 시기 대구에서는 계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계몽운동은 독립협회 대구지회의 설치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대구광문사와 대구광학회라는 두 계몽운동 단체가 자생적으로 설립되어 근대적 교육시설을 크게 확충하는 교육진흥운동이 추진되었고, 근대적 산업 진흥도 함께 추진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 이후 대구의 계몽운동은 1908년에 설립된 대한협회 대구지회로 집결되었다. 이 무렵 대구에서 새로이 설립된 달성친목회는 대한협회 대구지회와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청년층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음으로 1910년대 대구의 민족운동은 계몽운동과 의병항쟁의 흐름으로 분화되었다. 계몽운동은 재건된 달성친목회와 강유원간친회에 의해 펼쳐

졌고, 의병항쟁의 흐름은 대한광복회에 계승되었다. 특히, 재건된 달성친목회는 1910년대 대표적 국권회복운동 단체였고, 여기에는 경북과 경남지역의 운동 세력을 크게 아우르고 있다.

그 다음으로 3·1운동 이후 대구의 민족운동은 부르주아 민족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으로 분화되었다. 개항 이후 형성된 부르주아층 가운데서 민족적 입장을 견지하던 부르주아층들은 1920년대 초반 문화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1924년 전국적으로 자치운동이 제기되면서 대구의 부르주아층도 좌·우 세력으로 나뉘어졌다. 3·1운동 직후 대구에 사회주의 운동 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1920년대 초반 대구청년회와 대구노동공제회 등 대중운동단체와 상미회, 수양단 등 사상단체를 통해 기반을 확대해 나갔다. 이양대 운동 세력은 지역사회의 현안에 따라 연대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했다. 특히, 신간회 대구지회의 설립에는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 세력이 통일전선을 형성했다.

1930년대 일제의 만주침략과 신간회의 해소로 말미암아 민족통일전선이 붕괴되면서, 부르주아 민족운동 세력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었고 사회주의 운동 세력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 혁명적 대중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해방 후 대구에서는 당시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였던 건국 사업에 여타 지방에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근대 민족국가 건설 과정에서 대구의 정치세력은 좌우로 나뉘어져 있음에도 좌우합작을 성사시키는 특징을 보였다. 첫째, 해방 직후 대구에서는 좌익 성향의 건국준비위원회와 우익 성향의 경북치안유지회가 각각 결성되었으나 두 단체는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건국준비경북치안유지회로 통합되었다. 이로써 대구 최초의 좌우합작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미군의 대구 진주와 국외 민족운동 세력의 귀국이 대구지역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쳐 대구의 정치세력은 좌파의 대구시인민위원회와 우파의 경북독립촉진회로 재편되었다.

둘째, 모스크바 삼상회의 직후인 1945년 12월 말부터 다음해 1월 2일까지

대구의 좌우의 세력은 반탁의 명분 아래 조선신탁관리반대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함으로써 두 번째 좌우합작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대구의 좌우세력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안을 둘러싸고 총체적 지지와 신탁반대로 다시 대립하였다. 그렇지만 양대 진영은 극한 갈등을 피한 채 서로의 연대 가능성은 열고 놓고 있었다.

셋째, 한민당·한독당·조선공산당·인민당 등 4개 정당이 참여하는 대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명실상부한 좌우합작을 성사시켰다. 상설기관으로 운영된 대구공동위원회는 민생·문화·산업경제 등 당면문제의 해결과 친일 잔재 청산이라는 정치 문제까지 다루었다.

이처럼 해방 후 대구에서는 지역현안 문제 해결과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민족통일전선 형태의 좌우합작을 실현함으로써 중앙 및 다른 지역의 정치 지형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해방 후 국가건설 과정에서 좌우합작의 모범적 사례를 보인 대구에서 어떻게 10월항쟁이 일어난 것일까.

### 10월항쟁에 대한 학계와 지역사회의 시각

1946년 가을 대구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번져간 이 사건에 대한 명칭이 〈10·1사건〉, 〈10월 폭동사건〉, 〈10·1폭동〉, 〈영남폭동〉, 〈10·1소요〉, 〈46년 가을 폭동〉, 〈10월 폭동〉, 〈추수 폭동〉, 〈10월항쟁〉, 〈10월 인민항쟁〉 등 인 데에서 나타나듯 역사적 평가도 그만큼 편차가 큰 편이다. 이 명칭에 대해 당시 미군정은 '소요'로, 우익은 '폭동'으로, 좌익은 '항쟁'으로 규정했다. 학계의 경우는 이 사건의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며, 크게 보아 '항쟁', '사건', '폭동'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시기별로 살펴본다.

'10·1사건' 당시 이 사건에 대한 평가는 폭동과 인민항쟁으로 대별된다. 먼저, 경무부 등 치안당국과 한민당 등 우익세력은 좌파세력의 사주에 의한

공산 폭동이라는 반공주의적 평가를 했다. 그것은 당시 경무부의 「대구소요사태의 경위서」(《조선일보》 1946. 10. 8)와 언론의 「남조선폭동의 진상을 해부함」(《비판신문》, 1946. 10. 28)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한민당의 조헌영은 「영남 소요의 진상·원인·대책」(《재건》, 1947. 2)에서 “이번 폭동은 파괴적 선동분자들이 이 사회심리를 이용해서 발화점까지 끌어올려서 교묘히 점화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대구의 좌·우익 정치 세력이 연합한 좌우합작위원회에 좌파를 참여시킨 것이 영남 소요의 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폭동이라는 사건의 형태보다는 사태의 원인을 진단한 입장이 제기되었다. 「남조선 민요(民擾)의 원인과 처리 - 당국은 먼저 소인이 무엇에 있었나를 알라」(《민성》 2권 11호, 1946. 12)와 「조·미공동소요대책위원회 보고서」(1946.11.29 제출) 등은 ‘10·1사건’의 전개 형태가 폭동이었음을 지적하면서도,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친일 민족반역자의 미청산과 식량수급정책의 부재 등에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이의 개선을 주장했다. 이런 시각은 사건의 전개 형태보다는 사건의 발생 요인으로서 사회경제적 원인에 주목한 것이다.

이에 반해 좌익은 ‘10·1사건’을 인민항쟁으로 규정하면서, 이 사건을 동학, 3·1운동과 같이 자주독립과 민주개혁을 위한 민주주의 성질을 가진 인민항쟁이라고 주장했다.<sup>1</sup>

이러한 ‘10·1사건’ 당시의 주장들은 사건 가담자에 대한 특별군정 재판에서도 폭동 대 3·1운동이라는 논쟁으로 이어졌다. 그 만큼 이 사건에 대한 정치세력의 입장에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1960년 4·19민주운동 이후 ‘10·1사건’에 대한 성격 규정에 변화가 생겼을까. 상산고인(上山孤人)의 「10·1事件 裏史」(《영남일보》, 1960. 12)에서는 대중의 시위 형태가 폭동으로 진행된 것을 비판하면서도, 그 책임을 경찰에

1 박헌영, 「10월 인민항쟁」, 1946.11.

문고 있다. 이 견해는 사건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보이되 사건의 원인을 중시하는 평가이다.

그러나 이런 인식도 군사쿠데타 이후 바뀌어 다시 폭동으로 규정되었다. 군사쿠데타 이후 군부세력이 스스로 민정이양을 한 후 치른 1963년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 언론인 이목우에 의해 발표된 「대구〈10·1폭동〉사건」(《사상계》1963. 11)에서이다. 이후 대구에서는 당시 시위 참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10·1사건'은 공산주의 선동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되었다.

1980년대 5월 민주항쟁과 6월 민주화운동을 경험하면서 10월항쟁에 대한 역사인식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먼저, 사건 명칭을 폭동과 항쟁이 아닌 '10·1사건'으로 불러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김재호는 「해방 직후의 대구사회」(『거친 들판에 씨앗을』, 분도출판사, 1985)에서 '주지<sub>主</sub>는 시<sub>時</sub>나 방<sub>方</sub>법은 비<sub>非</sub>'라는 사건 직후의 언론 보도를 들어 '10·1사건'으로 규정했다. 또한 언론인 출신인 정영진이 쓴 『폭풍의 10월』(한길사, 1990)은 이 사건에 대한 가장 현장성이 돋보이는 서술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저자는 좌우의 정치세력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면서 가치중립적인 평가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글에서는 대중 혹은 민중의 처지와 행동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 주목받을 만하다.

이 시기 한국 사회의 변화는 학계에도 영향을 미쳐 10월항쟁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가 대거 생산되었다.<sup>2</sup> 이들 연구들은 좌익이 '신전술'을 구사한 것은 인정하나 항쟁의 전개과정을 아우르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대구·경북지역의 특성과 민중의 차발성을 강조하고 있다. 커밍스의 경우 항쟁의 자연발생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한편, 정해구

---

2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상, 하』, 청사, 1986 ; 정해구, 『10월일민항쟁 연구』, 열음사, 1988 ; 심지연, 『대구10월항쟁연구』, 청계연구소, 1991.

의 경우는 사회운동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곧 해방 직후 전체적인 사회 상황이 항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주·객관적 조건에서 발생한 민중항쟁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후 '10·1사건'을 항쟁으로 규정하는 연구들이 생생되기 시작했다. 이후 학계에서 이 사건을 항쟁으로 평가하는 연구 경향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TK정서'로 불리는 대구지역의 정치성향은 '10·1사건'을 여전히 폭동으로 규정하여 전형적인 반공주의적 시각을 내보이고 있다. 『내 고장의 반공투쟁사』(한국반공연맹 경북지부, 1987)에서 항쟁 가담자를 '폭도', '난동분자', '불순분자' 등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입장은 『대구시사』 2권(대구시사편찬위원회, 1995)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10·1폭동사건」이라는 제목 아래 “해방정국 가운데 우리 민족이 독립과 건국을 주체적으로 담당하지 못했던 데서 빚어진 가장 참혹한 동족 살육의 비극적 사건의 하나였다. 당시 한반도 전체를 진동시킨 피비린내 나는 이 사건은 한 마디로 해방 직후 발생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혼란과 무질서가 극도에 달한 상태에서 일부 극렬 좌익의 자극으로 폭발한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10월항쟁 57주년이 되는 2003년에 대한정치학회 주최로 열린 '10·1사건의 재조명 : 전개과정과 영향'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10·1사건'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재조명이 시도되었다.<sup>3</sup> 이 심포지엄에서는 민간인 피해를 학살, 사건을 (민중)항쟁, 국가폭력과 저항폭력과의 충돌, 단선단정의 확정 계기 등으로 살피고 있다. 이런 발표들은 대구지역 사회가 이 사건에 대해 폭동으로 평가하는 반공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당시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폭력의 내용성에 대해 심도 있는

3 이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글은 다음과 같다. 신복룡, 「1946년의 대구사건」; 정해구, 「10월항쟁의 발발과 전개과정」; 안소영, 「폭력의 증폭적 연쇄와 이념주의: 10·1사건의 방법론적 재조명을 위한 시론」; 이창희, 「10·1항쟁: 불완전한 국가폭력 대 국민국가 건설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저항폭력의 충돌」; 김일수, 「10월항쟁이 정부수립에 미친 영향」.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이 사건의 역사적 논의를 한층 심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10월항쟁의 배경과 전개

10월항쟁의 배경은 전국의 일반적 상황과 대구지역의 특수한 상황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해방 후 전국의 일반적 상황에서 본 10월항쟁의 일차적 원인은 해방 후 국가건설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개혁 요구가 좌절된 데 대한 민중의 분노라 할 수 있다. 곧 당연히 배제되고 처벌될 줄 알았던 친일 민족반역자의 재등장, 만연하는 실업난과 모리배의 발호, 해외 귀환동포의 급증과 이에 대한 무대책, 토지개혁의 지연과 인민위원회의 좌절 등이 해방과 더불어 그 새로운 기대로 충만했던 민중의 좌절감을 급속히 심화시켰던 것이다.<sup>4</sup>

게다가 미군정의 무원칙한 식량정책과 식량 강제 매입은 민중의 원성을 샀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식량부족과 이에 따른 기아 문제는 심각했다. 식량의 강제 수매가 시작된 1946년 2월 초에 소두 한 말에 150원 하던 쌀값이 3월 초에는 암시장에서 270원으로 치솟았고 시내의 양조장과 두부 공장 앞에는 술지게미와 비지를 사려는 굶주린 시민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고 있었다.<sup>5</sup> 이러한 식량부족으로 인한 기아 투쟁이 자주 벌어졌는데 그 한 장면을 소개하면, 당시 해방과 함께 해외 동포들이 급거 귀국하면서 대구역 뒤편의 칠성동에는 해방촌이라 불리는 빈민촌이 형성되었는데, 주민 중 80여 명의 부녀자들이 코흘리개들을 들쳐 업고 빈 쌀자루를 들거나 빈 비구니를 머리에 인 초라한 행색을 하고 대구부청에 몰려가 “배고파 죽겠소!” “배급 쌀 주소!” 라고 외쳐댔던 것이다. 또한 당시 경북도 학무과의 한 조사자

4 정해구, 「10월항쟁의 발발과 전개과정」, 28쪽.

5 정영진, 『폭풍의 10월』, 한길사, 230쪽.



료에 따르면 초등학생들 가운데 평균 50% 이상이 점심을 먹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전 학생의 20% 정도는 아침밥을 죽으로 때웠고, 저녁에도 전체의 절반 가량의 학생 가정이 밥 대신 죽을 먹어야만 했다.

또한 1946년 중순경 미군정의 탄압에 직면한 좌익의 위기와 좌익 3당 합당 문제를 둘러싼 좌익 내부의 사정이 '신전술'을 통한 강력한 대중투쟁을 모색하게 했고, 이것이 10월항쟁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10월항쟁의 전개는 좌익의 '신전술' 채택에 따른 9월총파업에서 비롯되었다. 9월 23일 부산 철도파업으로부터 시작된 9월총파업은 다음 날인 9월 24일 대구의 철도파업으로 이어졌다. 당시 대구에서는 철도노조와 전매노조의 영향력은 강력했다. 대구의 총파업은 이들 노조가 소속되어 있는 조선노동조합대구평의회에 의해 주도되다가 9월 27일 남조선총파업대구시투쟁위원회(위원장 윤장혁)가 지도했다. 9월 30일 현재 대구의 우편국 노조, 출판노조, 섬유산업 노조 등이 파업에 참여했고, 경북에서도 파업이 줄을 이었다. 이에 30일 대구와 경북에는 30여 개 업체와 4천여 명의 노동자가 총파업에 참여했다.



9월 총파업과 우편국 노조의 파업

1946년 9월 30일부터 남조선총파업대구시투쟁위원회가 위치한 전평 경북위원회 사무실(현 대구시민회관 주변) 앞에 노동자 및 시민들이 집결하기 시작했다. 10월 1일 대구역 앞에서 철도 노조가 주축이 된 노동자들의 총파업 시위가 벌어졌다. 그날 저녁 시위에 참여하고 있던 시위 군중 1명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이 10월항쟁의 서막이었다.

10월 2일 아침부터 대구역 주변의 공회당(현 대구시민회관)과 전평 경북위원회 건물 사이 도로에 수많은 노동자와 부녀자들이 집결하여 거리를 가득 메웠다. 또 대구경찰서 주변에도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들어 대규모의 시위 군중을 형성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역 주변에 미리 배치되어 있던 경찰이 또다시 발포함으로써 양측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시위 군중들이 대구경찰서를 접수했고, 이 소식이 대구 전역으로 번지면서 시위 군중이 경찰을 공격하는 일이 도처에서 벌어졌다. 경찰과 시위 군중 사이에 유혈 사태가 벌어지자 미군정 당국은 탱크를 동원해 시위 군중을 해산시키는 동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통금령을 내렸다. 대구의 사태는 가라앉았지만 시위는 경북 각 지역으로 파급되었다.

이때를 분수령으로 하여 대구의 항쟁은 좌익의 지도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확산되어 간 특징을 보였다. 그것은 일제 시대의 종말과 함께 청산되어야 했을 친일파 처리 문제 등 당면 문제가 미군정의 설치로 해결되지 않은 채 오히려 민중들을 압박해 오자 그것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폭발하여 일어난 항쟁이었다.

그러므로 10월항쟁은 단순히 지역적 차원의 문제 폭발이 아니라, 해방 공간에서 전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던 문제에서 발생한 항쟁이었다. 그리고 해방과 함께 변화되어야 할 식민지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가 미군정에 의해 유지 혹은 재생산되는 것에 반대한 대중들의 항쟁이었다.



10월항쟁 당시, 체포되는 시위자

### 10월항쟁의 유산과 과제

10월항쟁이 발생한 대구에서 10월 21 밤에 계엄령은 해제되었다. 10월항쟁은 많은 유산을 남겼다. 우선,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다. 이에 대한 자료는 발표기관마다 서로 달랐다. 제5관구(경북) 경찰청은 경찰 피해만을 발표했는데, 사망자 31명, 부상자 30명, 행방불명 36명이었다. 조병옥 경무부장의 발표에서는 경찰 사망자 45명, 검거자 수 2,700명이 제시되었다. 군정당국(M-G)의 발표에서는 경찰 측 사망자 43명, 행방불명 13명, 부상 61명에, 시위대 체포자수 3,153명이었다. G-2의 경우 경찰 측(경찰보조원 및 자경대원 포함) 인명피해는 사망 80명, 행방불명 및 납치 145명, 부상 96명이었고, 시위대의 피해는 사망 48명, 부상 63명, 체포 1,503명이었다. 이처럼 4개 기관의 발표 수치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시위대의 피해규모가 아예 발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피해의 규모를 파악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더구나 치안회복과 검거과정에서 대규모의 폭력이 가해졌던 것을 고려하면 민간인의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소요가 있었던 마을에서는 총성이 끊이질 않았다. 폭동에 관련이 있건 없건 좌익계 단체에 이름만 올라 있어도 폭도로 낙인찍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제 빨갱이'가 대거 양산되어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발

발 이후 수감 상태에 있던 좌익계 인사들이 대거 처형을 당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피해의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반공주의를 밑바탕으로 한국가 폭력은 공리적 전제로 받아들여져 일방적 경로만이 남게 되었다.

여기서 놀랄 만한 사실은 10월항쟁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의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진상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1946년 10월 당시 민간인 피해자의 신원 확인이나 시신의 처리 등등 수습과정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진상부터 먼저 밝혀야 되지 않을까.

다음으로 항쟁은 민족문제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유보시키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항쟁 이후 미국의 한국인화정책이 확정되어 단선단정의 수립으로 귀결되었다. 곧 10월항쟁은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이후 한국인화정책을 추진하면서 단독선거를 계획한 미국의 대한정책이 확정되는 계기가 되었기에 남한정부 수립의 시작점이었던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항쟁의 원인과 전개과정 분석, 해명에 집중한 지금까지의 연구 경향을 넘어서서 국가건설 과정 혹은 남한정부 수립 과정에까지 연구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올해로 10월항쟁 58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1946년 10월의 대구를 기억하는 사람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우리는 항쟁에 대한 기억과 경험이 잊혀지기 전에 지금 당장 그것을 기록해야 할 역사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10월항쟁에 대한 기초조사와 진상규명이다. 아직 10월항쟁 과정에 대해 밝혀 놓은 것이 없는 실정이다.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여 어떤 사람이 어떻게 희생되고 처리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는 항쟁의 현장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연구의 심화이다. 항쟁이 지역사회와 개인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를 해명해야 하며, 전체 우리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해명해야 한다.

그렇다면 10월항쟁에 대해 누가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이 항쟁은 대구에

서 시작되었기에 지역사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세기를 넘게 지역사회를 짓누른 정치 정서를 넘어서서 과거의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용기와 반성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무엇보다 역사의 진실을 겸허히 밝히는 것이어야 한다. ■

---

김일수 kigo105@hanmail.net | 성균관대학 박사, 현 대구사회연구소 연구위원.